

# III

---

##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 2. 국토연구원



## 평가등급 현황

### [ 평가등급 기준 ]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 [ 평가등급 현황 ]

#### 1 연구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A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A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A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S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A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A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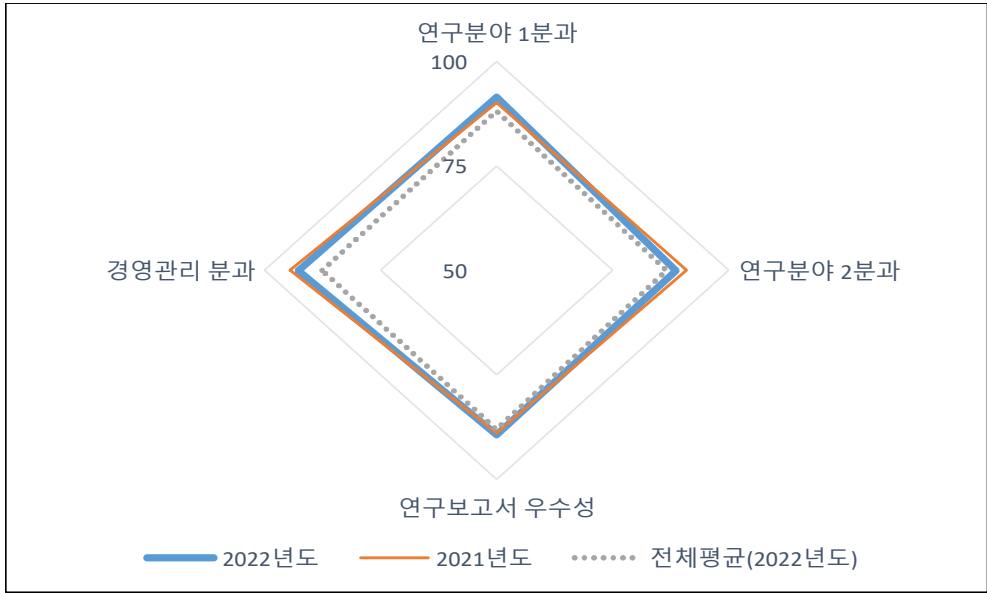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C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D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A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B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A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A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A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절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A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S
		③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A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S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연구분야 1-2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PESTEL 분석, 200만 건의 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연구 수요조사, 국민연구제안 등의 과정을 통해 연구수요와 핵심 현안이슈를 선정하였음.
- 기본과제 공동책임제 신규 도입, 개방형 수시과제 책임 선정 제도, 기관 공의 정책영향력 평가 제도 시행, 연심회의 실질적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연구윤리 자체검증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함.
- 연구수행단계의 우수성으로 정부 담당자 수시 소통, 중요과제 업적평가에 추가 반영, 정책방안 제시 4가지 유형(단일 정책 제시, 복수 대안 정책, 포괄적 정책 전략, 중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국가긴급 및 정부 현안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이 체계적이고, 과제 수행 성과뿐만 아니라 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도 우수함.

-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기획·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화 및 입법화를 위해서도 정부 부처와 국회, 전문가 등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성과를 정책화하고 입법화하는 데 많은 실적을 거둠.
- 집행사업의 단계별 평가지표 설정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자와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경영 분야]**

- 7S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외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수자원정책연구단 신설, 그린인프라정책 연구센터 개편 등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함.
- 연차휴가 월별사용촉진제도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 등 기관의 복무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비정규직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방지노력, 적합직무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을 모두 초과달성한 점은 고무적임.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충실하게 대응하였으며, 자체감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교육의 효과성 관리를 건의함.

## 1

## 연구 분야

##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 1-1-1. 연구과정 관리

##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 〈우수한 점〉

- PESTEL 분석, 200만 건의 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연구 수요조사, 국민연구제안 등의 과정을 통해 연구수요와 핵심 현안이슈를 선정하였음.
- 찾아가는 국민연구제안 우체통 같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함.
- 6단계에 걸쳐 세분화된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목표와 핵심 현안 이슈를 설정하는 구체적 노력이 있음.
- 정부교체 시기 신속한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제안서 대면심의를 병행 시행하는 등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연구기획의 과정과 절차가 있음.
- 정책연구협의회(2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운영(31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국토부, 행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공동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한 점이 우수함.
- 국회에서 개최한 국토 관련토론회와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였음.
- 전년 대비 대국민 연구수요조사가 대폭 확대됨(28건에서 154건으로 5배 이상 확대).
-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 8대 핵심 현안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사업목표를 설정한 것이 우수함.
- 연구기획단계에서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공개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 그 결과 28개의 기본일반과제를 발굴하였음.
- 유관부처 업무계획 분석 등 국정과제와 부처 제안과제 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획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음.

-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국가·사회적 현안 이슈들을 빅데이터 분석, SNS 수요조사, 국민참여단 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점은 우수함.
- 연구기획의 각 단계마다 내외부 정책고객의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고 환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음.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장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며, 이러한 의견이 과제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다양화가 필요함.
- 국토 관련 연구기관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획에서 정책수요자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기획단계부터 의사결정 참여가 필요함.
- 연구기획 발굴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고객이 지나치게 정부 행위자에 편중(약 76%)되거나 정부 행위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참여 실적은 2회(0.9%)로 여전히 저조함.
- 연구기획 각 단계별로 국민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산재해 있어 중복·중첩의 우려가 있음.
- 지자체 대상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부족함. 대부분 수도권, 충청권 중심의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국토균형발전의 큰 맥락에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부족함.
- 해외도시의 현황을 청취하는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함.
- 연구기획의 각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어떻게 상호연계되어 최종적인 연구과제 선정으로 연결되는지, 예컨대 1단계의 PESTEL 분석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움.

###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 〈우수한 점〉

- 과제 발굴 및 선전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65%에 가까운 정책고객 의견 반영률을 유지하는 등 연구과정의 대외 개방에 적극적임.
- '23년 기본연구사업 19건 중 기초과제는 5건(26.3%), '23년 기본연구사업 투입예산 비중은 총액 11.2억 중 3.2억(28.5%)으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음.
- 국정과제 및 민생현안 부합성, 연구사업목표 부합성, 파급효과, 정책고객 의견 반영을 통해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됨.



- 근무성적평정규칙상 중점연구사업에 대한 예산(보통과제 예산의198.6% 지원) 및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등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노력함.
- 중점과제는 협동연구 수행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협동연구과제 수를 줄이고(70%에서 63.2%로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 예산은 증액해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 협동 및 융복합 연구 발굴 TF 운영으로 협동연구 기획·발굴 역량이 강화되었음.
- 원내 구성원 간 협업 분위기 조성 위해 전문연구모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음.
- 국정과제의 국정목표를 연구과제에 반영하였으며 기본과제 19건 중 정부부처(중앙행정기관) 제안과제는 10건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4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과제 통합 및 조정의 수행 주체와 통합 및 조정의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음.
- 과제발굴 시 정부, 국회, 국민 외에 산업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민의견이 연구선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가 1-2개 정도의 협력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협력기관을 좀 더 확대하여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의 창의적인 과제가 부족함.
- 정부정책과제 반영 시 중앙정부 의견만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연구원의 성격상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과제 발굴할 필요 있음.

###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 〈우수한 점〉

- 기본과제 공동책임제 신규 도입으로 원내 협업 연구를 강화함.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과제 수는 30% 축소하고 과제당 예산은 30% 증액하는 등 과제수행체계의 전면 개편해 연구질을 향상함.
-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로 연구진 내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함.
- 외부심의위원의 연구심의 참여가 매우 활발한 편임(외부전문가 356명, 연구자문 1,547인).

- 연구과제 평가 및 심의의견 환류 체계가 매우 입체적이고 단계적이어서 연구의 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 높아 보임.
- 직급과 소속을 따지지 않는 개방형 수시과제 책임 선정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전문연구원급 이하 연구원의 연구분위기를 진작함.
- 기관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정책영향력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정책방안 제시를 유형화하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 원클릭 지식자산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연구결과물의 활용도를 증진함.
- 연심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해 재검토율이 24.2%에 달하는 등 연심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협동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협동연구 발굴 TF를 별도 운영하는 등 협동연구에 특화된 수행체계를 구축함.
- '22년 협동연구과제 수 122건(57.0%), 예산 145억원(56.7%), 투입인원 670명(56.5%)으로 그 중 국토연 주관 협동연구가 1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주도적 협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심회 등 연구과정 관리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그로 인해 연구 수행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를 저하할 가능성도 있는 바 연심회 운영을 보다 유연화하여 연구진의 행정업무 부담 등 연구 외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최종보고서 평가 시 외부전문가 참여가 주로 학계·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계 참여가 매우 저조한데 산업계 전문가를 추가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수시과제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 점은 수시연구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긍정적이지만 4개월로 규정된 기간이 다양한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최대 12개월까지도 연장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시연구의 다양성(전략·정부요청·일반) 등을 고려해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해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별도의 발간·출판 관련 독립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별도의 발간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본·일반과제 연구심의회 및 보고서 리뷰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을 보면 연구주제의 내용이 다소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플랫폼 구성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체계가 부족해 보이는 바,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된 지자체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외부 협력 네트워크에는 상대적으로 지자체나 그와 관련된 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인 바, 기관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지자체, 유관 기관 및 조직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 〈우수한 점〉

- 원 내외 합동 연구윤리 자체검증단(TF)를 구성·운영해 2년 연속 자체검증에서 클린 기관 목표 달성함.
- 연구윤리 자체검증단을 구성해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연심회 개최 시에 연구윤리 준수 정도를 매년 평가해서 점수에 반영하는 등 연구윤리 점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2022년 총 2,806건의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부주의 점검 사례를 적발함.
- 연구윤리 부정행위 제보 코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함.
- 연구윤리 자체검증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윤리 자체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함.
- 연구윤리 관련 법령과 상위 규정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윤리 관련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연구윤리 자체검증체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음.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 전담인력을 1인 배치하고 있는데 기관 규모나 연구윤리 관련 업무 부하량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측면이 있는 바, 부서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토록 하거나 연구윤리위원회 등 별도의 총괄조직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자체점검 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데 내외부 자체 검증단 외에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보고서 수행이나 검독단계에서도 카피킬러 시스템 외 체계적인 윤리 검증이 교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층화할 필요 있음.
- 자체점검단의 검증위원 구성에서 내부 68명 외부 10명으로 72건 과제 규모에 비해 검증위원 규모가 적고 내외부 구성비의 편차가 심한데 외부위원 확대를 통해 구성비 개선이 필요해 보임 (자체점검단을 내부2 외부2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72개 과제를 78명 검증위원으로 검증하려면 5차례에 걸친 분산 검토와 위원 중복 검토를 허용한다하더라도 외부위원의 업무부하량이 많아서 정밀한 윤리검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외부위원 확충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협동연구과제는 별도의 자체검정 대상이 아니고 연구책임자와 기획평가팀 수준에서 가볍게 다루어지는 느낌이 있어 외부위원의 검토 과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화해서 객관적인 윤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있음.
-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심의회나 계획 수립 등에 한정되어 있어 보고서의 내용만으로 볼 때 거의 퇴화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고 외부위원의 구성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자체검증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내부 연구자와 외부 연구자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 연구자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내외부 구성원에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 〈우수한 점〉

- 연구성과의 홍보, 확산체계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홍보확산 수단 다양화를 지적 받고 이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실적도 증가함.
-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지식자산 공유시스템, 연구성과 웹사이트, 연구성과 전시공간 운영이 특색이 있음. 인터랙티브 리포트, 국토TV & EBS 다큐 (유튜브 채널 활용도가 높음), SNS 카드뉴스 인포그래픽등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실적이 우수함.
- 1차 연구, 2차 확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연구성과를 재가공해서 확산한 실적이 우수함.
-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출판수단, 보도자료, 기고 및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출현 등 실적이 우수함.
- 어린이, 국민대상 성과확산 실적이 우수함.
- 세미나, 심포지엄,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배포 실적이 62,000건 내외에 이르는 등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및 국회, 산, 학, 연 협력 실적이 우수하려, 정책수요자와의 대내외 소통 및 협업정도가 우수함.
-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정책연구기관' 비전과 '글로벌 연구 협력 네트워크 내실화'라는 목표에 기반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 계획 및 전략수립이 우수함.
- 전략개발을 위한 SWOT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실천계획을 수립함.
- MOU 체결 및 이에 기반한 협력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지난 3년 평균 대비 실적이 우수함.

- 정책연구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부부처, 국회, 유관기관, 학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계획 수립 및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국토 분야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를 위한 국내외 중점 협력기관과의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계은행 등 MOU 체결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 국내외 전문가 대상 활발한 인력교류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해 건수 기준 전년 대비 37.5% 실적이 확대되어 우수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홍보확산 및 환류체제를 담당하는 기구 및 부서간 협업체계 조직화가 필요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성과가 입법 또는 정부정책 지원 성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 〈우수한 점〉

- 연구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지원 실적이 우수함.
- 2022년 기준 4,434건(누적)을 등록하여, 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 중 최상위그룹(2위)를 차지함.
- 2022년 등록대상 중 2023.3.31까지 등록대상 자료(기본 28, 수시 14, 일반 12) 제외하고 모두 등록함.
- 연구과제 이외 정기간행물과 세미나자료, 브리프 및 워킹페이퍼도 NKIS에 등록하여 연구확산에 기여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발간 기획단행본 중 약 90%는 비매품으로 발간하였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전체 원문을 제공하여 민간지원 실적을 강화함.
- 「업무상 저작물 처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 및 제공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누적 4,434건을 등록하여 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 중 2위를 차지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공개 연구과제가 12건으로 다소 많음. 2016~22년에 수행한 연구에 대해 비공개 사유가 소멸 되는대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공개로 전환하는 절차를 갖출 것을 제안함.

##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 〈우수한 점〉

- 국토 분야 9대 핵심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영향력 평가를 통해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고 있음.
- 국정과제 지원 실적에서 국정과제 지원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법/제도 제·개정 23건, 정책지원 116건, 민생지원 18건, 시범사업 추진 12건 등 총 169건의 성과를 도출한 점이 우수함.
- 2022년 전체 수행 과제가 204개(95.3%) 연구·사업에 예산 239억원(93.4%)을 투입하여 국정 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대표사례 수행을 통해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및 국토기본법 개정 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86. 국정 목표 4와 연계하여 추진한 실적이 우수함.
- 대표사례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 관계 법제도 마련, 전략 수립, 사업 발굴 및 시행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한편 전담연구 조직(탄소중립국토 도시연구센터 신설,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을 신설하여 추진함.
-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에 따라 국토·도시 부문, 건물 부문, 수송 부문별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도출,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및 관련 정책연구과제, R&D 과제 등을 발굴함.
- 대표사례의 주요 성과인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로 선정, 16개 후속 연구 수행, 국토교통부 탄소공간지도 구축사업 발굴, 정부 토론회 8회 및 위원회 3회 활동, 번역서 2건 및 기타 발간물 7건 발간, 언론 11건 보도 등 성과가 우수함.
- 정책화 실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 관계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파급 효과로 탄소 종합 플랫폼 구축, 탄소 감축 사업의 준비, 계획안 작성, 건설 및 준공, 사후 관리의 전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정책의 종합 플랫폼 기반을 마련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년도 평가에서 균형 발전과 관련한 장기적/거시적 시각에서의 국정과제 관련 연구 수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그와 관련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 성과가 명확하지 않음.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기관 설립 목적, 고유 임무와의 부합성 정도를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정 과제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관련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표사례 선정에 있어서 국토, 교통 문제에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 〈우수한 점〉

- 정책 방안을 단일 정책 제시, 복수 대안 정책, 포괄적 정책 전략, 중장기 정책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함.
- 연구기획, 수행, 완료단계에서 연구수요조사, 전략과제의 선정, 정책영향력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정책화 및 기여도 제고를 위한 3단계 정책 기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연구기획단계의 우수성으로 정부, 국회, 국민의 3대 정책수요자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국정·민생현안 지원연구 발굴을 강화함.
- 연구수행단계의 우수성으로 정부 담당자 수시 소통, 중요과제 업적평가에 추가 반영, 정책방안 제시 4가지 유형(단일 정책 제시, 복수 대안 정책, 포괄적 정책 전략, 중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연구완료단계의 우수성으로 정책영향력(Impact) 평가 및 수탁과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로 과제별 정책 기여를 관리하고, 국토정책 Brief 등 발간물, 언론 홍보, 뉴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함.
- 연구수행단계의 우수성으로 주요 입법화 및 정책화 실적에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간정보법, 도로법등 법/제도 제·개정 23건, (정책지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정책지원 116건 등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시 각 단계마다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참여도가 필요함.
- 연구기관의 여타 정책 기여 성과에 비해 입법화 실적 또는 성과는 다소 미흡함.

##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 〈우수한 점〉

- 정부 정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긴급연구 대응역량을 확대하였고, 긴급 및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위한 조직(5개 센터)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여 정부 요청 긴급 수시과제 14건, 국가긴급 및 정부부처 현안과제 90건을 수행함.
- 수시연구과제 중 정부 현안과제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수시 연구과제 중 정부 긴급요청 과제 수행 비율을 21년 51.8%에서 '22년 60.9%로 상향함.

- '22년 긴급 및 정부현안인 주거안정, 균형발전, 디지털 교통혁신,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 건설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둠.
- 국가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정부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TF의 조직과 운영,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 비연구 과제 성과가 우수함.
- 긴급 현안연구 대응을 위한 각종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행정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과제 수행을 통한 정책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함.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시장 진단과 정책 과제, 국가도시정책방침 제도화를 위한 사전 연구 등 수시과제 14건(60.9%), 예산 1.5억(61.2%)을 투입하여 정부 긴급지원요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7.3%,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56.6%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이 권고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부처 국정과제 관련 수행건수 169건 중 정부 요청 긴급 수시과제 수행 실적(14건)이 비교적 저조하므로 상향할 것을 요청함.
-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취지,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부처 제안 과제 비율의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 〈우수한 점〉

- 반지하 거주 가구 홍수 피해, 주택금융 환경변화, 디지털 트윈 국토,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등 주요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
- 열악한 주거환경, 주택담보대출, 지방 인구 소멸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
-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민간 등 정책 수요자와 정책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연구성과의 정책화 및 입법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와 계기를 통해 정책수요자에게 정책 대안을 전달함.
- 디지털 트윈 국토, 국토모니터링,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등에 관한 입법화가 이뤄지고,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각종 국가 및 지자체 계획의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이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된 정책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공론화되고 있거나 다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
- 단기와 중장기 정책대안에 관한 현행 제도와 자원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바탕을 둔 정책 제안이 필요함.
- 새로운 현안을 다루는 연구과제의 경우, 정책대안을 구체적 제도 및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재정적 요구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대안 중심의 연구를 위해 후속 연구를 편성해주기를 건의함.
-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 민간 기업 등의 전문성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차, 디지털 트윈, 스마트그린산단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정부 정책화를 위해서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단계별 재정 소요 등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일부 사업(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안의 모색을 통해 향후 사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우수한 점〉

- 집행사업의 내부 성과 관리체제와 더불어 국민, 유관 부처·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을 포괄한 업무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도 적절히 이뤄지고 있고 정책네트워크도 창출하고 있음.
- 사업계획, 집행, 결과, 환류 단계를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사업 개선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세부 추진사업/단위 업무별 성과 목표 및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시기 및 방법 내용을 세밀화하고 있음.
- 집행사업 영역 중 정부 정책 지원사업에서는 새 정부 정책 방향 지원, 관련 법 개정, 정책지원 연구 추진, 정책 활용방안 및 법제도 개선방안 등의 측면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함.
- SWOT 분석 등 체계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류를 위한 노력도 지속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영역의 확장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분야 또는 집중 투입 분야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집행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 조사를 할 때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체적인 환류 시스템은 모든 집행사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환류 시스템은 일부 집행사업에서 활용되지 않음.
- 내·외부 환경분석이 분석 자체에 그치지 않고, 환경분석과 사업발굴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명확히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거복지정책 지원사업’도 다른 사업처럼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정·개선하고 사업 결과를 공유하는 환류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 〈우수한 점〉

- 국토연구원의 경우 국가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와 과제들 중에서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연구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임. 특히 소멸위기 지방 도시, 탄소중립, 인공지능, 부동산시장, 빅데이터와 도시기능, 주거 양극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주제들을 적극 발굴한 점을 높이 평가함. 세부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국토균형발전 등과 같은 일관된 문제의식 하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정책연구로 구현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거 연구들과 어떤 차별성을 보이고 또 진일보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공공임대주택 정책 효율성 평가” 과제의 경우 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쳐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차별성을 보였고,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 과제의 경우 문제의식은 물론 연구 방법 등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연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최근 수년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이슈에 대해서도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수 개발에 천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임.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연구결과가 정책 개발로 이어지는 정책연구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측면 역시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생각함.
- 근자에 들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에서 인공지능 기법을 통한 연구를 시도하는데, 연구 성과 차원에서 시의성과 타당성을 공히 유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국토연구원의 경우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과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잘 해결한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초기 기획에 따라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이 진행되었고, 관련하여 자료 및 통계활용의 수월성도 담보한 것으로 판단됨. 이 연구는 소지역단위 인구 분포 특성과 변화 패턴 등을 파악하고 참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줬음. 또한 향후 다른 주제로의 학술적 확장 역시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에 언급한 우수한 점과 함께, 미흡한 점 역시 있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이 아쉽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음.

- 2022년에 진행된 국토연구원 연구과제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발견되는 미흡한 점은 대체로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부 연구 결과의 경우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는 설명으로 이뤄졌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임.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우수한 점”과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 다수의 과제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일부 과제의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에 관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 또 다른 과제에서는 기존 정부기관에서 행해지던 청년창업가 육성정책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한국형 주거한계가구 진단”의 경우 사례연구 숫자가 적어서 일반화의 문제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체로 국책 연구기관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보이는데, 예산과 시간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질문의 정교한 설정, 새로운 연구방법의 설계, 분석결과와 정책발굴 사이의 다차원적 고민 등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일정 부분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마지막으로 연구의 완성도 자체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극 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육성방안 연구”의 경우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문헌연구의 비중이 높게 다뤄진 측면이 있는데, 연구자들의 의도와 달리 이러한 경우 연구 완성도 차원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니, 향후 이러한 부분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우수한 점〉

-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두 개의 협동연구보고서인 “국가균형발전 3.0 패러다임”과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 모두 한국이 지향해야 할 선진국 위상 및 이와 연동된 국가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음. 연구 주제 자체에서 비롯되는 방대한 연구 규모를 운영가능한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통제하면서, 많은 정책 효과를 생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두 과제 모두 비교적 현실성 높은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정책효과가 기대됨.
-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두 개 과제 모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역할을 잘 제시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ODA 사업 관련하여 기존 사업의 한계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6개국의 시범사업과 대상도시를 선정하는 제안은 ODA사업연구의 새로운 성과로 평가받을 만함은 물론 소위 ‘한국형’ 선진국 모델 제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만 국가균형발전 과제의 경우,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지,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한 목표 정립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부분임. 결과적으로 제시된 제안들은 규범적이고 논리적이거나, 이러한 제안들이 제시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전략으로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함.
- 또한 아무리 우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로부터 가독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본 과제의 경우 동일한 용어가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서술이 상세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한 마디로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마지막 시점에서 다소 짧은 시간 안에 보고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됨.
- 마지막으로 ODA 과제의 경우 거시적인 정책 대안과 미시적인 정책 대안이 모두 언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연구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기초 자료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2

## 경영 분야

### 2-1. 경영관리

#### 2-1-1. 리더십

#####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우수한 점>

-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 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연구지원 행정혁신 등의 경영목표에 대해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시과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연구센터 확대 개편, 웹기반 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조직개편체계를 구축함.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영향력 평가(IMPACT 평가)를 5년 동안 실시하여 정책화에 기여한 경우 가점 부여하는 등 경영목표 달성과 국가기여도를 동시에 관리하는 노력이 돋보임.
- 연구기관 경영목표 설정에 있어서 ‘연구, 제도, 행사, 조직’ 등 연계수단을 활용하여 경영목표의 실천력이 높이고자 함. 특히 경영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계획의 규정 및 규칙 반영 등 제도화), 기반조성활동으로서 네트워크 구축 등 조직정비 노력이 돋보임.
- 1년차 전체경영목표 실천과제 181개중 66개 완료함. 연구성과의 정책화 전략 강화(50%),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42.9%), 공정한 평가체계 확보 및 우수인력 양성체계 구축(44.4%) 달성은 성과가 높은 편임. 실천계획에서 제시한 22개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였고 기관장 임기 1년차 누적달성률 36.5%로 실적이 양호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실천계획별로 달성도를 평가함에 있어 제시된 연계수단(연구/ 제도/ 행사/ 조직)이 계획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음(예: 1-1-2.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은 연구와 행사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달성도에 행사 실적은 없음). 실천 계획별로 제시된 연계수단이 실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도록 논리적 연계가 요구됨.
- 경영목표 실천계획과 성과목표 및 실적간의 적합도를 점검할 필요 있음. 예를 들면, 목적지향적 연구조직 운영(추진전략 8-1)의 추진실적으로 중장기인력수급계획 수립, 희망근무부서 이전 배치 등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바, 기관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닌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도출한 실적을 제시할 필요 있으므로, 실천계획 전반에서 실적관리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학계, 지자체, 지역연구원 등 협력에 있어 보다 저변과 외연을 확대하여 국토도시분야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 또한 청소년 국토교육지원 사업의 오프라인 지원대상과 범위가 세종시 등에 제한되어 있음.
- 22년도 경영목표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체계 재정비라는 특화된 목표를 위한 차별화된 지점이 무엇인지, 제도화 이후 실행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구체적으로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별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이나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정량/정성)가 제시되지 않음. 실천계획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정량적 또는 정성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 〈우수한 점〉

- 기관장과 부서 관리자간의 소통채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전체 구성원과의 소통도 원활해진 성과로 이어짐. 단계별 경영목표 이행현황 소통 체계도 확립됨.
- 구성원들과 의사소통과정뿐만 아니라 피드백 활동 역시 실질적으로 진행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반적으로 온오프라인 소통 및 환류체계 강화 노력이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연구역량 국제화, 해외 공동연구 추진 등은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내용과 상관관계가 모호함.
- 채널의 활성화 및 실질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널은 기관장 임기 중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된 원인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들과 대체로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진행과정, 피드백,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등의 관점에서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 〈우수한 점〉

- 국가정책 달성을 위한 기관 주도의 적극적인 대외 협력 노력이 있었음. 특히 다양한 전문가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노력이 돋보임.
- 연구회와 공동과제 수행을 위한 주도적 과제를 제시했는데, 정보화사업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음.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대외 활동 실적이 전개된 점을 잘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적 담론 창구인 언론을 통한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임.
- 연구회와 다양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한 바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연구회 소속 기관으로서 일상적인 파트너십의 유지로 보임. 대외적 활동이 특정 정책 수요 집단에 치우진 경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성격의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기대함.
- 주요 대외적 활동실적이 결국 의사소통의 증진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는지 관리하고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구성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라는 관점에서, 기관장 경영목표와 더 구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 (1)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조성 연구

#### 〈우수한 점〉

- 국정과제 및 경영목표에 부합하며 기후위기라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를 국토연구원 차원에서 적합한 문제의식으로 전환하여, 연구원의 역량을 잘 활용하여 다단계 의사결정을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함.
-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대한 적극적 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도시연구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탄소중립도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기관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리더십이 행사되었고, 동시에 성과 확산 과정에서도 기관장의 노력이 반영됨.
- 공론화, 정책화를 지원하고 협업 및 융복합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다층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달성도를 연도별로 이정표 방식으로 제시함. 즉, '21년 중장기계획을 설계하고, '22년에는 실행전략을 도출한 이후, '23년 본격적으로 이행 및 확산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함.
- 국가지역단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과 고위급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등의 노력을 수행함.
- 기후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조성을 위해 2022년 9건, 2023년 5건의 자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자체연구사업비, 연구개발적립금 약 11.2억을 지원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여러 국책연구기관이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어, 이들 사업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여지가 있음.
- '22년 목표에 제시된 법령 제·개정 관련 사항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지방시대의 균형발전을 위한 허브라인 이외에도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나 연구과제에 기관장의 의지나 기여도가 좀 더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함.

**(2)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우수한 점>**

- 기관 내 연구직과 행정직의 협업사업 추진을 통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가동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 청소년 국토교육을 위해 기관내 지원사업단을 신설하고 기관 누리집을 활용하여 청소년 국토교육콘텐츠 허브를 구축하여 연구원 역량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기여 측면이 강한 사업을 선정하여 기관장의 리더십이 적절하게 반영됨.
-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최초 단계부터 투입되었고, 초기 안정적인 론칭으로 인해 사업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큼.
-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수행 과정이 전개되어 관련 단체들과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한 부분은 기관장의 리더십이 잘 발휘된 점으로 우수함.
- 사업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다채널을 통한 교육 콘텐츠 기획, 영상교육콘텐츠 및 조희수 등이 우수하며,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조직 전략과도 연계성이 존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평가의 하나로 국토교육 콘텐츠의 수요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미흡함.
- 청소년 교육을 위한 역할은 인정되나 실제로 청소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과 연결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내용 발굴 노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된 국토부 위탁사업으로 기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했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3) KRIHS 월드 캠퍼스 구축 및 시범운영

#### 〈우수한 점〉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기획을 실시하고 조직체계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하며, 콘텐츠 마련을 위한 기관내 협업과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업 수행 노력이 높은 편임.
- 전문가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매우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가 발생했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인해 최초 의도한 성과가 충실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일종의 국토건설 및 개발에 대한 ODA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매우 시의성 높고 국토연구원은 물론 한국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잘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됨. 사업 선정 및 수행 체계 수립 과정에서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함.
- 42개국 145명의 교육생(평균연령 38세, 석박사 78명) 인원이 존재하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가동 및 활용, 하이브리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실적이 양호함.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한국환경연구원, 국토 도시정책 전문가, 국내외 온라인 교육플랫폼 기업 등과의 상시면담 및 협의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
- EBS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지식자산을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UN-Habitat, EAROPH, KOICA, MIT(개도국 교육중, 기획단계에서 도움)과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하고 강의를 재활용하고 있음.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정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나, 수강인원이 145명으로 제한적이므로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유입 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 학습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청소년 국토교육 콘텐츠와 호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있으며,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국내 관련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노력이 요구됨.
- 명실상부 월드 캠퍼스답게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추진노력과 외연확장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획 노력이 필요함.
- 개도국 연수생 등 현재와 미래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 〈우수한 점〉

- 7S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외 환경을 분석하고, 각 환경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대응이 요구되는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직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함.
-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본부 간 협업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수자원정책연구단' 등 4개의 한시적 하부조직을 신설하였으며, 탄소중립 연구 역량 강화 및 정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기존 '그린인프라연구센터'를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로 개편함.
- 무기계약직 책임 과제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등 직종과 상관없이 조직구성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성과 향상을 도모함.
- 고충처리 실적과는 별개로 조사위원회 구성, 고충상담원 지정 등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맥킨지 7s Model은 내부요소를 조사하여 기관의 조직디자인을 분석하여 조직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외부환경 중 기회나 위협 요인을 발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전년도와 비교하여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가 현저하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 및 경영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기관 차원에서 조직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체계가 미흡하며, 특히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 또는 과제·사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 연구과제 관리체계에서 중간 성과점검은 1회(중간연구심의회)로, 연구과제 및 사업의 추진 과정 중 성과와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므로 성과 제고를 위한 주기적·상시적 모니터링 등 관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 〈우수한 점〉

- 중장기인력수급계획(22년~24년)에 기관의 인재상을 마련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임.
- 공개채용와 블라인드 체계 하에서 기관의 인재상에 맞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함.
- 교육훈련비 규모가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고, 1인당 교육훈련비가 전년 대비 180천원 증가하였음.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업무성과평가 계량화 비율이 70%이고, 비연구직의 업무성과평가 계량화 비율을 40%로 관리하고 있음.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대해 연구직의 업무성과 평가시 과제 이외 마일리지를 부여함에 있어서 자체 학술지인 「국토연구」에 대한 비중이 KCI 등재지나 국외 전문학술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임.

##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직원대외활동적용기준 등을 마련 및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외활동을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함.
- 대외활동 사후신고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대외활동 사전신고 비율이 전년 대비 8.3% 향상됨.
- 근무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자체정기 감사를 통해 '21년 대외활동 지연신고한 3인에 대해 주의 조치 시행 완료함.
- 근무관리가 적절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대외활동 지연신고 및 사전신고 누락에 대한 주의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정하며 월별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함. 개인별 연차휴가 소진율이 100%이며, 연가저축제 도입을 통해 연차휴가 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함. 해당연도 휴가일수의 최대 50% 한도로 5년간 이월 저축함으로써 휴가 활용을 촉진함.

-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한 복무관리실시 및 직원대상 메신저 공지 및 PC-ON/OFF 통합 운영을 통해 주52시간 근로 준수를 강화함.
- 안식년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논문게재가 의무화되어 있음.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 신고비율이 21년 대비 소폭 하향했지만 특히 연구직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간편 신고 시스템이나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사후 신고비율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근무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이후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공문처리 및 통보에 의한 완료가 아닌 조치사항에 대해 구성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숙지시킬 수 있도록 공지 및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됨.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연근무제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식년제도 운영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추진계획, 대상자 선발과정은 적시되어 있으나 시행실적에 따르는 대상자에 대한 세부내용이 누락됨. 대상자에 대한 연구주제, 훈련기관, 승인기간 등에 대한 세부 내용과 기관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안식년 및 연구연가 수행직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권고함. 연구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해야하는 등에 대한 기한명시와 더불어 논문게재 불이행시에 대한 제재사항도 함께 규정마련이 될 필요가 있음.

### 2-1-3. 사회적 책임

####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명문화하였음.
-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기타 다양한 제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적이 우수함.
- 4단계 Lifecycle 별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마련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에 대한 홍보활동이 우수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이 요구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함.
-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실적이 고르게 있지만, 조직 규모에 비해 실적이 높지 않은 편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 좋겠음.

####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 <우수한 점>

-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지침과 인사관리규정, 위촉직 보수표를 정립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심층 논의 필요 사무 직종에 대한 3단계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산 유지보수 인력 1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완료 1명 실적 있음.
- 비정규직을 위해 노사협의회 외 부서를 통한 안정적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음.
- 무기계약직 연구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선정이 계속 증가하는 등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매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비정규직의 상시·지속성 인력 여부를 검토하여 중장기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규정과 임금수준, 그리고 차별개선 내용을 포함한 향후 계획, 교육, 복리후생 등의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채용안정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과평가 규정이 동일한 것이 비정규직의 근무환경 저하로 연계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우수한 점>**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를 명시하고 각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고자 노력하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라 별도정원 6인을 계획하여 6인을 충원한 실적이 있음.
- 전년도 건의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절감재원과 추가소요재원에 따른 금액을 추계하여 별도정원 및 신규채용 계획이 예측가능함을 알 수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적합직무를 명시하여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책임과 연구참여의 근거가 명확치 않고, 각 업무가 부여된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우수한 점>**

-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 운영, 감사실에서 신고사항 조사 관리, 연구부조리 신고와 통합 운영한 결과, 외부신고(영상공모전 수상작 저작권 침해, 드론영상 적법 여부 등 민원 제기)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수상 취소, 공모전 선정과정 제도 개선 조치 등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진행됨.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음.
- '22년 5.19일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지침도 마련하는 등 윤리경영 규정현행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갑질과 관련된 징계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쉬우나, 재발방지를 위해 갑질신고사이트를 개선하고 갑질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함.

-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감봉)가 1건 있고 갑질 신고사건에 대해 갑질 취약계층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부조리신고센터내 갑질신고 상세안내 및 익명신고 기능 추가 등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마련됨.
- 집합교육 및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전직원 대상 교육을 장려하여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은 관리자 91.7%를 달성하였음.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통제수단으로 청렴옴부즈만지침을 만들어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3회 운영하여 자문을 얻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부조리 신고와 연구윤리 신고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클린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실제 민원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 제도 운영, 채용담당자 교육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징구, 비대면 계약 원칙, 기일내 대금 지급, 청렴위반시 계약해제 등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외부업체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갑질근절대책에 포함하는 등 불공정방지를 위해 노력함.
-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원장을 참여시켜 의사결정력을 확보하였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인권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음.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중 특히 사업지표부분에 대해 기관의 특성을 잘 살렸으며, 연구부서와의 협조로 연구착수 초기부터 인권경영지표에 맞춰 연구가 진행되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수함.
- 인권영향평가결과 143개 중 긍정답변이 140개에 이르는 결과를 얻었으며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였고,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규정 관련하여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포함한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 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은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임직원 행동강령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정 마련이 요구됨. 예를 들어 명예퇴직 지급제한 대상자가 임원으로 임용되거나 자회사에 취업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보강하는 등 개별 규정과 지침을 다시 점검할 것을 권고함.
-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반부패, 청렴 관련 교육은 4번에 그치고 있으며 전직원 온라인 청렴반부패 교육은 전직원 대상 58.4%와 관리자 대상 39.4%,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참여율이 전직원 대상 55.7%와 관리자 대상 45.5%로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함. 윤리경영과 관련한 교육 실적은 나타나지 않음.
- 인사규정상 특별전형 및 채용규칙에 특별채용 규정이 남아있으므로 최근의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규정개정이 필요함.
- 현재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시 혹은 필요시에만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되어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인권피해구제 지침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인권피해구제절차를 전 직원에게 정보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함.
- 인권침해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외부신고사이트가 미흡하므로 개선하되, 기존의 클린신고 사이트 연계하여 기관의 특성을 살려 접근성 있게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전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 임원, 인권경영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 임원,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 〈우수한 점〉

- 배정된 청년인턴이 채용계획 대비 200% 목표를 달성 하였고(배정인원 8인 대비 신규채용 16인), 청년인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평정하고 성과평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우수 인턴에게는 3% 가점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 예산배정액 중 일부를 소진하지 못한 바, 시간외수당을 인건비로 변경하는 등 청년인턴 예산을 유연성 있게 사용할 것을 권고함.

##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우수한 점〉

-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경단녀 방지노력, 적합직무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2년 1인을 채용하였음.
- 여성직원 승진비율의 지속적인 증대('20년 17.4% → '22년 45.2%)가 이루어지는 등 여성관리자의 확대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 2022년 연간신규채용자 중 여성인력비율이 61.7%에 달함. 즉, 성별 간 균형을 유지하며 양성 평등한 채용 인사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됨.
-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여성 직원이 육아 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력함.
-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상 동종산업 평균비율 15.2%를 고려하여 관리자 목표비율을 15.2% 설정하였으며, 실제로는 17.8%로 초과 달성한 점은 긍정적임.
- 보훈특별고용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1인을 채용('22.6.28)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에 적합한 직무(사무지원직 등)에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점은 고무적임.
-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 직급별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교육이수 비율이 높으며, 양성평등과 관련된 필수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조직 구성원들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향상 도모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의 활용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여성보직자 관리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여성인력 활용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여성보직자 중 연구직 보직자의 비율과 비연구직 보직자 비율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의 경우, 동종업계 평균 및 기관의 다년간 업무추이 및 최근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도전적 목표 설정이 아쉬움.
-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폭력예방 교육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참여율을 100%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심화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 〈우수한 점〉

-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4.5%로서 정부권장기준인 연평균 의무고용률(3.6%)을 초과 달성하였음.
- 특히, 장애인 제한경쟁을 통해 4회 실시하여 청년인턴(장애인) 5인을 채용하고,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실적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한 점은 고무적임.
-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취업지원부에 장애인 채용공고 홍보를 의뢰(2회)하였으며, 직원 채용 시에도 직원 채용규칙 19조(특례) 및 위촉직 운용지침 제5조의 3(채용특례) 등 관련 법률 적용 특례조항을 구비함.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인원 수(17인)와 우선고용률(6.4%)이 정부권장기준(6%)을 충족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채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한경쟁을 통해 관련 신규 채용 실적(1명)이 있음.
- 직원채용규칙 상 국가유공자 등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시 제한경쟁에 의한 채용근거 규정이 명시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참석률이 87%로 100%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기업제품 구입실적은 2021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에 있어서, 본원 특성에 맞는 차별적 노력도 권고함.

##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우수한 점>

- 국정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지적사항에 대해 의무고용률 준수와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월 비상임감사 정기보고를 이행하고 있으며, 제한경쟁 채용 사전 협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부동산 취급부서 등에서 재산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한 점이 우수함.
- 감사 전문인력이 평균 7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임. 또한 감사실장이 우수감사직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표창 등이 인정되어 우수한 성과임.
- 근무일 준수, 자체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 등에 있어서 비상임감사의 활성화 방안을 준수하고 있어 긍정적임.
- 자체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을 관리해나가는 등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직원 설명회 및 전파교육을 실시한 점 등이 우수함.
- 국내출장과 대외활동 중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개선 조치 노력이 인정되고, 외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주관부서와 확인부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한 것이 긍정적임.
- 자체 정기검사로 대외활동 지연신고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주의 처분과 환수조치를 완료한 점이 바람직함.

####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직원 대상 교육의 참석율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감사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육일자는 확인이 되지만, 감사역량 성과목표와 달성여부 등 교육의 효과성을 관리하는 것은 다소 미흡함.

- 정기 자체감사의 대외활동 지연신고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교육이나 절차 개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함.
- 채용전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마련되었으나, 관련 부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기대함.

